

불·탈법 당원 가입 정밀조사...광주 광산 갑·을 타깃 될 듯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 진위 전수조사 배경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4만1000여 명의 권리당원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리당원 모집에 불·탈법 극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중앙당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불·탈법으로 모집된 당원을 찾아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불법 당원 파문이 인 광주 광산 갑·을 지역구에서는 1명의 지역 정치인이 필적이 똑같은 권리당원 입당원서 수십 장을 제출해 지적을 받는 등 '권리당원 확보=공천'이라는 총선 분위기가 속에서 각종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광산 갑·을 지역구의 경우, 도를 넘는 권리당원 모집 경쟁 탓에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탈법이 적발된 만큼,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민주당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진영의 권리당원들이 무더기로 당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 내년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에도 상당한 파문을 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4만 1000여명은 한 주소지에 4명 이상의 당원이 가입된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문제가 된 광산지역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동일 주소, 다수 입당자' 문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권리당원을 무더기 모집하면서 '허수'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광산지역 한 정치인이 하루에 접수한 수 십장의 권리당원들의 주소지는 광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광주 전 선거구에 고루 분포해 광주시당이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산 지역구에 접수된 상당수의 권리당원은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권리당원이 광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등의 '지역구 활동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심지어는 충청도와 경기도 등지에

필적 같은 무더기 입당원서에

충청도·경기도에 주소지

한 주소지에 8명까지

권리당원 표심 50% 반영

당원 모집 과열 불·탈법 난무

당원 무더기 자격 잃을 수도

총선 경선 과정 파문 일 듯

주소지를 둔 일부 유권자들은 광주시 당에 전화를 걸어 "나도 모르게 민주당 광산 갑·을 지역구 권리당원으로 신청했다"고 잇달아 항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광주시당으로부터 불허된 상당수의 입당원서는 당원 모집 마감일을 앞두고 무더기로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에서는 동일 주소에 7~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례 등도 상당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 '허수 권리당원'만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 가점 확대, 권리당원 투표권과 일반인 여론조사 각각 50%씩 반영 등 당내 경선 룰이 과거와 달리 일관되지 않게 정해지면서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다.

당내 정치 신인 가점이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선거구별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이 늘어난 점도 허수 권리당원 속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진행했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선택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내년 총선 권리당원 모집도 더욱 치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불·탈법 권리당원 모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SRF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영향성 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해 26일 지역주민과 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 산업자원부가 합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합의 관계자들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료 LNG로 변경땐 전남도·나주시 부담 늘고 지역민 난방요금 인상

■나주 SRF 기본합의서 살펴보니

난방공사 "적자 2.4배 늘어나"

광주 쓰레기 처리도 난관 봉착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기본 합의서 체결에도, 남아야 할 시련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남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평가다.

기본 합의 이후 오히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 합의에는 SRF가 LNG로 바뀔 경우 전남도·나주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지역민들은 기존에 내던 난방요금에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등 쟁점거리가 없는 사항이 빠져있다. 세부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기본 합의의 체결로부터 1년

이내 부속 합의를 체결하기까지 협로가 예고된 상태다.

◇전남도·나주시 부담 얼마나·기본 합의는 난방 방식을 SRF 대신, LNG로 변경할 경우 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합의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는 부속 합의서에 담길 예정이다. 2700억원을 들여 지은 SRF 발전소를 매몰 처분하는 데 들어갈 비용, SRF 대신 LNG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 견주 2.4배 정도 적자 폭이 커진다는 난방공사측 주장 등도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일부 주민들의 난방 문제를 왜 전남도가 감당해야 하는지, 지역민들은 기존에 내던 난방요금에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등 쟁점거리가 없는 사항이 빠져있다. 세부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기본 합의의 체결로부터 1년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는 난방공사측 입장도 향후 설비 증축 과정의 부담 주체를 결정할 때 고민할 문제다.

◇혁신도시 입주민들, 난방비 더 내야 할 듯= '열공급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요금을 인상한다.' 기본 합의서에는 지역민들의 난방 요금 인상을 명시했다. 이 내용을 고려하면 LNG로 바뀔 경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상 폭은 난방공사측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자 폭을 고려하면 30%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말이 난방공사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전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민도 난방비를 더 내야 하는 점은 향후 되짚어볼 문제다.

◇광주시, 쓰레기 문제 어쩌나= 이번 합의로 광주시도 쓰레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SRF 대신, LNG로 운영하게

될 경우 더 이상 광주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광주는 별도 매립장·소각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광주에서는 생활쓰레기(하루 530t)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키로 했다가 나주 지역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단한 상태다. 전남도 안팎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부를 포함한 광역 민·관 거버넌스를 결성해야 할 시기'라는 말이 나오

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이미 매립장 추가 조성에 나선 상태로, 일부 고형연료를 장성 복합물류터미널 내 쌓아놓고 있을 정도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위해 준공된 목포·신안지역 전처리시설, 순천·구례 전처리시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따른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 대통령 귀국... '조국 정국' 등 국정현안 점검 나서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방미 기간의 주요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가속화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국 해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공항 청와대로 이동하지 않고 영접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항 청사 안으로 이동해 잠시 대

회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함으로써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미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 국제사회 공통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OI
클러스터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8년 연속수상

산티아고 순례길

국내 유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산티아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최대 50만원 할인 (~9/30까지 예약시) | 동반자 할인 40만원 할인 | 추가 할인(4명 이상) 10만원 할인

11/9 11/16 11/23 [단 3회 출발]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혜택!

- 4성급 호텔 | 전문 인솔자 동행 | 전용차량 대기
- 알바르게 숙박 X | 순례길 전문 가이드 | 배낭없는 편안한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3대도시] 9일

5일 걷기 | 순례길에 집중하고 싶다면 | 3,690,000원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4일 걷기 | 순례길을 체험하고 관광을 동시에 | 3,790,000원

스페인 북부 12대도시 + 프랑스 길 9일

포르투갈 8대도시 + 포르투갈 길 9일

2일 걷기 | 순례길 맛보기 & 관광 집중 코스 | 3,890,000원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 가이드/기사경비 | [인전경비단계]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여행금지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 지역의 경우 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너] 소지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비 가산계좌로 인출되고 있습니다. ●종료구분: 일반여행 4678(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인 영일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992 ●여행준비지: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국, 숙박 등은 관세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